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Bu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빌딩 603호
TEL. 051-506-6633 FAX. 051-506-6635
E-MAIL. bcsw1125@hanmail.net

소통과 참여로 가치있는 변화를

부산사회복지신문
Busan Social Welfare News

제197호
2015년 7월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박성주 http://www.bswin.net 기사제보와 광고문의 | 051-506-6633

상위 20%보다 하위 20% 소득 늘어야 경제 성장

IMF, 소득 불균형 확대는 경제에 악영향 미친다고 밝혀

국제통화기금(IMF)이 소득 상위계층 20%보다는 하위계층 20%의 부가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크다며, '낙수 효과'(트리클 다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고서를 6월 15일 내놨다. 낙수 효과는 부유층의 소득이 높아지면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늘려 저소득층도 잘살게 된다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개념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소속 경제학자 5명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150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분배와 국부의 연관성을 조사해 이런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소득 상위 20%의 부가 1% 증가하면 5년 뒤 국내총생산은 최종적으로 0.08% 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은 같은 기간 0.38%포인트 늘었다. 보고서는 "소득 불균형 확대는 (이처럼) 경제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 배분을 늘리고, 중산층의 공동화로부터 확실히 벗어나야 성장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 불균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추정했다. 첫째, 가난한 아이들이 질낮은 교육을 받고 대학 입학을 포기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부의 집중은 총수요를 줄여 경제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술적 진보와 하락해진 노동조합, 글로벌화, 부자들한테 유리한 조세정책 등이 불평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난을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건강·교육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와 좀더 진보적인 조세 정책 등을 조언했다.

〈블룸버그〉 등은 이번 보고서가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등의 우려와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부자 증세'를 통해 중산층 살리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으며, 프란치스코 교황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의 이번 보고서가 개별 국가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실제 정책 조언 기조와 너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디언〉은 "보고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소득 불균형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와의 협상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 2명 중 1명, 계층상승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27%에 불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모습은 볼 보듯 뻔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가 이 같은 희망 없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든다. 요즘 '평범한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도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의 튼튼한 버팀목이자 경제의 중심축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 웬만한 소득으로는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줄고, 하류층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양상이 자녀세대까지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산층 이미지와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눈에 비춰지는 한국사회의 모습은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도 힘든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10명 중 6명이 한번 가난해지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은 14.0%에 그쳤다. 또한 2명 중 1명은 앞으로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의 계층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바라봤으며, 향후 자녀세대의 계층상승이 자유로울 것 같다는 의견은 단 10.3%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시각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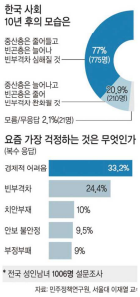
한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최근의 현상도 조사결과에서 여실히 확인됐다. 전체 10.9%만이 한국은 중산층이 많은 나라라고 바라봤다.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그만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평균 이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스스로의 계층을 평가한 결과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전체 27%에 불과했으며 상류층이라는 평가는 단 0.6%뿐이었다. 반면 자신이 하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46.3%로 절반에 가까웠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1%였다.

소비자들은 중산층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은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규모와 현금 보유량과 직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소득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중산층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학력과 학벌, 사회적 인맥을 갖춰야 중산층이 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식수준과 문화적 취향 같은 사회문화적인 관심사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됐다. 이는 문화적·지적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중산층이라는 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평가 결과, 10명 중 2명만이 중산층이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약자들에 관심이 많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는 시각도 매우 적은 수준으로, 한국사회의 중산층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회적 역할에는 다소 소홀하다는 평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중산층이 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시각은 전체 3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재산을 축적해왔을 것이라는 평가도 27.9%에 그쳤다. 젊은 층일수록 중산층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재산을 모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더 두드러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대체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라는 의견에는 절반에 미치는 못 하는 40.5%가 동의했다.



MERS 관련 부산사회복지계 현황

부산지역 메르스 주의기간 평균 **6.3일** 휴관

지난 16일~18일 부산지역 각 사회복지 직능단체의 협조로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기관의 대응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99%**의 기관들이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과 안내자료를 비치하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는 등의 지자체 권고 사항들을 원활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62%**의 기관이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생기는 하반기 부담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88%**의 기관에서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충분한 양의 위생용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소규모 기관에서는 위생용품을 구비하지 못한 채 질병예방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위생용품 구매를 위한 예산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사개요
기간 : 2015년 6월 16일(화) ~ 18일(목) / 3일간
대상 : 부산 10개 사회복지 직능단체(277개 기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 전 세계적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이러한 전염병 사태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

ex) 위생물품 지원 시스템 /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관련 매뉴얼 또는 안내 정보 전파에 협력 / 재난 대처와 관련한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

▸ 관련 기사 5면에서 계속

부산복지 최우선 과제는 공공 보육시설

부산 시민 복지 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하는 사업을 시민 손으로 고르는 자리가 마련됐다. 6월 29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는 '부산복지 시민 원탁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부산시가 내놓은 부산 복지기준선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토론을 통해 실천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사전에 신발한 시민대표 50명, 복지 분야 전문가 50명이 참여했으며, 건강 주거 장애인 교육 생애주기 고용 소득 등 10개 주제로 팀을 꾸려 마련했다.

참가 시민들은 부산시민복지기준 핵심사업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질적 수준 관리'를 꼽았다. 이 사업은 5점 만점에 4.10점을 받았다.

메르스 사태로 이슈가 되고있는 '지역거점 공공기능 병원 지정·운영'(4.01), '건강-동네보건·의료·복지 안선망'(3.91)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시간 연장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3.74)도 핵심사업 5위에 올랐고, 방과 후 돌봄기관의 공공형 지정(3.69)도 7위에 올랐다.

원탁회의를 주최한 부산복지개발원 조의수 원장은 "향후 원탁회의를 시민회의로 발전시켜 복지기준선 틸성 점검과 기준선 직정성 평가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민복지기준 10대 핵심사업(만점 5.0)〉
1.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질적 수준 관리(4.10)
2. 지역거점공공기능 병원 지정운영(4.01)
3. 건강-동네보건, 의료, 복지 안전망(3.91)
4. 지역교육 균형 발전 추진(3.86)
5. 시간연장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3.74)
6. 건강한 마을 만들기 운영 확대(3.70)
7. 방과후 돌봄기관의 공공형 지정(3.69)
8. 저소득층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개량사업 지원(3.66)
9. 사회적 경제부분 일자리 창출 활성화(3.64)
10. 등급 외 경증기능제한 노인활동지원 서비스 구축 운영(3.61)

지면소개

2면 복지포커스
노인 워킹푸어들의 나라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

3면 알아봅시다
비영리 성과측정의
4가지 모델

3면 복지칼럼
문종술 변호사

4~5면 기획특집
국민연금 적정성 논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2015년 사회복지정책토론회

제도적 환경변화가 사회복지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사회보장급여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2015년 7월 15일(수요일)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

| 좌 장 | **조성혜 위원장**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기획위원회
| 발제자 |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 문 의 | 부산광역사회복지협의회 한송희 팀장(TEL.051-506-6633)

| 토론자 | **이병우** 부산진구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황소진 부산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
박은희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주 최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기획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

한국인, 사회적 연계 · 삶의 만족도 OECD 하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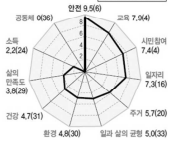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있는 비율, OECD 평균보다 16% 낮아

한국인이 각종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또 한국의 교육과 안전은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포함됐으나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에서는 하위권에 그쳤다. 6월 29일(현지시간) OECD의 '2015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5)에 따르면 한국은 11개 세부 평가부문 가운데 '사회적 연계'(Social Connections)에서 36개 조사 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OECD 회원국과 러시아·브라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회적 연계는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데 한국인은 72%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OECD 평균 88%보다 16%포인트 낮다.

한국은 총 11개 지표 가운데 사회적 연계를 포함해 절반에 가까운 5개 지표에서 OECD 하위 20%에 들었다. 또 한 삶을 여유롭게 하는 각종 지표에서도 하위권을 벗지 못했다. '일과 삶의 균형'은 36개국 중 33위였으며 '건강' 31위, '환경' 30위, '삶의 만족도'는 29위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의 척도 가운데 하나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은 한국이 18.7%를 기록했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는 주거, 소득, 직업, 교육, 환경,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다. OECD는 2011년부터 매년 이 지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 지난 6월 13일(토)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가 폐쇄 결정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신청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중단돼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졌다.

이번 개편에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일정 부분 증가해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182만 원 미만인 경우는 주거·교육급여를, 182만 원 이상 211만 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7월부터 주거급여제도 시행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칠 제도 변화가 줄줄이 이어진다. 하반기에는 주거급여 개편, 유한책임 대출 도입, 월세통계 세분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과 관련된 제도 변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7월 1일부터는 새로 개편된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중위소득 43% 이하)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비가 차등 지급되는 게 특징이다.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원 수준이다.

그리고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 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다.

노후대비 개인연금 가입, 고소득층 5.6배 높아

고소득층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개편으로 양극화를 줄여야

고소득 가구가 노후생활에 대비한 개인연금은 저소득 가구에 견줘 5배 이상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윤성주 부연구위원이 쓴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보면, 소득이 적은 1분위(하위 25%) 가구에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5.18%에 머물렀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4분위(상위 25%) 가구는 26.78%가 가입해, 소득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비율이 5배를 나 차이가 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의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소득·지출·조세·복지 등에 관한 재정패널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보고서는 2012년 기준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했다. 여기에 공적연금(국민연금 등)도 소득 1분위는 42.18%, 소득 4분위는 82.71%가 가입하는 등 두 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다. 노후소득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윤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의 경우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만큼, 세금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개인이 연금저축·연금보험 등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2~15%)를 주고,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개인연금에 가입해 있는 고소득층들의 경우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며 개인연금을 노후소득보다는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윤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연금 세금혜택은 가족이나 세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조세지출만 증가시킬 뿐, 노후소득 유인효과는 약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고소득층 세금혜택은 줄이고, 정책 효과가 큰 중산층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힘든 경제여건으로 개인 연금 가입 자체가 어려운 만큼,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년연장과 청년실업 악화는 상관관계 없어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은 대체 관계라기보다 보완 관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1차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살로 연장되면 청년실업률이 더 높아지리란 전망이 담겨 있다. 하지만 고령·청년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국내외 주요 연구 결과는 고용노동부의 이런 '세대간 일자리 전쟁' 담론을 부정한다.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6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정년 60살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연구는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는 대체 관계가 아니며 약한 보완 관계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개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의 '세대간 고용 대체 가능성 연구(2010년)'는, 1982년 7월~2010년 10월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고령층 고용률은 청년층 실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며 "청년층 고용과 고령층 고용 사이에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보고서에서 "청년층과 고령층 간 직종 분리가 상당해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이 대체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보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도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 권혁재 부연구위원도 2010년 발표한 '연령세대별 일자리 변화와 고용정책 과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상용근로자 수 202만3000명은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생산가능인구 798만9000명 중 25.3%에 불과하다"며 "described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들은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업 등 불안정 고용에 처해 있어 이들의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층 일자리의 악화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고 밝혔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청년실업의 원인을 중장년층의 고용 유지·연장 탓으로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난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사회·환경 등 전반적인 사회공헌 요구 높아져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서울시민 1000명에게 '국내 기업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6월20일부터 3주간)한 결과, 응답자의 80.5%가 기업 사회공헌에 대해 '대체로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2012년 전국 조사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은 각각 76.4%와 77.4%였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겨레경제연구소는 2009년부터 3년마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들이 집중해야 할 사회공헌 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다소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두 차례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사회를 위해 기업들이 집중해야 할 사회공헌 영역을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 순으로 꼽았다. 반면 올해는 고용 및 일자리 창출(49%), 환경(12%), 교육(9.2%) 순으로 나타났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용과 교육 영역에 대한 요구가 3년 전에 비해 높아진 반면, 사회적 약자 보호는 네 번째로 밀려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말 발간한 사회공헌백서를 보면, 2013년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비용 지출은 '취약계층 지원' 분야가 33.9%로 가장 높았고, '교육·학술'(23.7%), '문화예술 및 체육'(12.7%)이 뒤를 이었다. 박기찬 인하대 교수는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기업들의 사회공헌 지출 비용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은 향후 사회공헌 지출 영역, 대상, 운영 방법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회공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책임경영(CSR)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나는 소비자로서 기업이 일마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009년 37.6%에서 올해는 49.8%로 12.2%포인트 높아졌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도 6년 전 42.9%에서 2012년에는 51.1%, 올해는 53.7%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회성 기부 성격을 지닌 사회공헌 사업보다는 경제·사회·환경 등 전반적인 사회책임경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벌금 무이자 대출 "장발장 은행", 대출금 첫 완납자 나와

사소한 잘못에도 벌금 낼 돈이 없어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이들이 해마다 4만여명이나 된다. 이들에게 '벌금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장발장은행이 지난 2월 문을 연 뒤 처음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자'가 나왔다.

휴대전화 판매를 하는 최씨가 벌금을 내게 된 것은 '한 번의 실수'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늦은 밤, 술을 마신 최씨는 승차 거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최씨는 피해 택시기사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택시기사는 차량 수리비 20만원을 포함해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최씨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다. 뇌출혈로 쓰러져 2년간 병상에 누워 있던 최씨의 아버지는 한 달 전 세상을 떴고, 최씨에게는 아버지 병원비와 장례비용에 들어간 빚 3000만원만이 무겁게 남아있었다.

결국 최씨는 테이나서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지난해 말 법원은 최씨에게 재물손괴·폭행·상해죄를 물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자격 미달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제때 벌금을 못 낸 최씨는 수배자 신세가 됐다. 장발장은행을 알게 된 것은 그때였다. 최씨는 장발장은행에서 대출받은 150만원을 매월 25만원씩 6개월간 갚아가기로 '약정'했지만 지난 6월 9일 한 번에 다 갚았다. 감옥에 가지 않게 되면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빌려줬던 돈도 받은 덕이다. "벌금을 못 내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형편이 안 되도 벌금을 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씨는 현행 벌금 제도에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전액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장발장은행은 지금까지 155명에게 2억8600여만원을 빌려줬다. 후원계좌는 하나은행 388-910009-34004(예금주 장발장은행).

복지포커스

노인 워킹푸어들의 나라



이 승 윤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 다른 연령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동수준이 특히 열악해
-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은 한계가 있어
- 최저임금의 인상, 고용의 질 향상, 그리고 공적연금이 해결책

이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아마도 칠순 즈음의 노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끊임없이 일하려서도 가난에 시달렸던 그 청년들이 이제 노인이 된 2015년 오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우리나라는 정말 성장한 것이 맞을까?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일하려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왜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는가? 노인들은 왜 그렇게 열악한 노동을 하고 있는가?

2015년 3월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6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 정도이며, 이 비율은 2018년이면 20%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0%이다. 즉, 우리나라 노인들의 약 5분의 일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사 시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근로형태별 취업자 자료를 보면 2014년 6월 현재 60세 이상의 임금 근로자가 약 170만 명인데, 그 중의 68%에 해당하는 약 120만 명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총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33%로 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은 것을 볼 때,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특히 노인 인구의 경우 비정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가장 저임금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48%가 넘어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상대적 빈곤층에 속하고 실제로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 중의 53%가 경제적 어려움이다. 공적연금 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역시가 깊지 않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인데, 빠른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미 높은 노인빈곤율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노인빈곤 문제의 관련하여 현재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공적연금 및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성숙한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세대간 위무로 형성되고 있는 불안정 노동시장의 확대를 모두 고려했을 때, 현재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재분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 전반의 불안정성 해결을 위한 고민과 적극적 정책개입이 없는 한, 사회보장 정책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은 복지국가를 형해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날아가려는 애틀픈 새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현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은 사회보장을 통한 재분배만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일차 배분에 대한 개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먼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려서도 가난한 '노인 워킹푸어(working poor)'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이 전체소득 중에서 일해서 얻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63%에 달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북유럽 국가들은 12% 내외, 프랑스가 5%, 그리고 OECD 평균은 26%이다. 공적연금으로 인한 소득이 한자리나 낮은 절대조차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의 비중이 62%로 한국보다 높다. 즉, 우리나라 노인들은 총소득의 절반의 2이상을 일을 해서 얻고 있는데, 그나마 일자리가 저임금이고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단순히 할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노인 워킹푸어들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해결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워킹푸어(근로빈곤)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을 하는데도 빈곤한 주된 원인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관계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제시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확대와 함께 관련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관계의 일자리라는 점에 주목을 한다면,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해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노인종뿐만 아니라 청년층도 약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되는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13년 기준 24.7%로 OECD 국가들 중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다. 현재 55세 정도에 정년을 맞이하고 적어도 70세 즈음까지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의 수가 많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을 상당 폭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노인 워킹푸어 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임금 계층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 우리나라 이중 노동시장 구조의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고용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을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저임금의 불안정 고용관계만 양산해왔다는 점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저임금의 불안정 고용관계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바우처 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저임금 근로자의 수를 더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퇴직 이후 많은 수의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가능한 한 여전히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자리가 대체로 저임금의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저임금 노인 일자리의 확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셋째, 현재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공적연금 논의는 당장의 노인빈곤 및 노인 워킹푸어 문제의 해소와는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절반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당장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노인 워킹푸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 노동시장의 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정한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지금의 노인들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출처 : 복지국가소사이어티(http://www.welfarestate21.net)

알아봅시다

비영리 성과측정의 4가지 모델

올해도 지역복지기관 · 시설의 평가가 한창이다. 이번 호 〈알아봅시다〉에서는 평가기간 특집으로, 비영리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성과측정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블로그를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1. The Project Logic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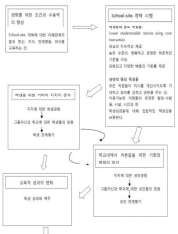


흔히 로직모델이라고 불리며, 가장 익숙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성과모델이다. 상식적이고 단순한 구조의 설명이라 너무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 모델 최대의 장점은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당연하게 전제되었던 생각을 논리적 순서로 보다 명확하게 나타냄으로, 내외부의 다양한 구성원들루부터 이해를 얻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직모델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있다. 모델의 모양이 달라진다기보다는 설명하는 중심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1) Outcome Model : 장기적 목적과 단기적 목표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줌. 장기적, 무형의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설명에 유용함
(2) Activity Model : 과정중심의 설명.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다양한 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여 '선행사건->결과' 관계를 나타내기에 적합함
(3) Theory Model : 프로그램의 근본이 되는 가정(assumption)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인 구성과 연계시킴. 왜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함

로직모델의 한계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단순직선의 한계 : 현실에서는 많은 원인과 중간변수들이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지만 로직모델은 단선적인 관계로만 나타낸다. 모든 대상자가 프로그램을 받지 못함을 경우, 프로그램 이수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2) 이론적이라는 한계 : 다음 이론적 모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위의 모델에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의 이론적 설명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로직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그램 부분 과정에 매몰되지 않고 '큰 그림'을 잘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데에 있다.

2. BSC(The Balanced Scorecard) 모델

BSC는 영리기업에서 만들어져서 이후에 비영리영역에서 차용한 모델이다. 이전에 영리기업은 모든 비용과 성과를 '돈'으로 환산해서 보았다. 일련 타당한 접근이긴 하나 기업이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돈'으로 모두 환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동시에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함께 안게 된다. 그 결과 카플란과 노튼이 BSC를 개발하게 되었다.

BSC는 사업수행 자체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내부가 장기적 목적과 전략에 일치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하는 '운영전략'이라고 했다. 즉, 다양한 업무 수행이 조직의 장기 목적에 맞게 수행되고 평가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툴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돈' 이외에 어떤 것을 측정하라는 것일까? BSC에서는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고객관점 : 고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 내부적 역량 관점 : 우리는 어느정도까지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 혁신과 학습 관점 : 발전과 가치창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 재무적 관점 : 소유자와 주주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러한 BSC가 다른 성과측정모델과 차별적인 부분은 보통 기업이 '매출 10억 -> 100억'과 같은 목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과정의 수행들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발전을 만들어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부적 능력'과 '혁신과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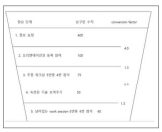
'돈'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함께 보고 측정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 영역에서 차용하기에 좋은 점을 가지고 있지만, 성과주의라는 사고방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미션과 가치를 각 과정에 반영하면서 수행해가야 하는 비영리 조직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비전과 내부역량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업무수행 자세를 가이드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3. Outcome Funding Framework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성과에 기반한 자금지원의 프레임워크이다. 원리는 위의 BSC에서 나온 성과주의 사고방식과 같다. 여기에서는 자금지원을 미사여구, 책무, 헌신, 이익에 대한 약속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을 사람(단체)의 능력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업 프로포절이 아닌 target plan(정확한 계획)에 의해 선정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제안서	목표계획
목구 기술	시장과 고비즈
목구조 목표	결과물과 산출목표들
프로젝트 서술	결과
작업 계획	중요 단계
기술 계획	핵심 단계
단체에 대한 부가정보	조직적 결과
평가설계	결과
결론문 예산	예산 개요
Letters of support	고비자 증거

오른쪽 목표계획을 보면 '결과'와 '중요단계'가 가장 다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포절을 쓸 때, 우리는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진행해서 어떤 목표가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로 (정해진)사업에 집중한다면 목표계획은 단계별로 성취되어야 할 중간목표에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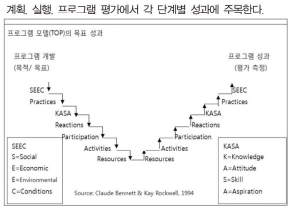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지원사업의 목표설정이다. 관련 정보를 요청한 사람들 중 1/40이 오리엔테이션과 등록에 참여하고 그 중 75%가 주중 워크샵 5회 중 4회 참석한다는 식으로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다. 즉 최종적으로 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간 유지하는 사람의 목표를 정하고 그 앞 단계인 취직에 성공한 사람을 그 수보다 30% 높게 하는 방식으로 역산해서 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단계별 목표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성취해가기 위해서 각 단계에서 사업을 즉시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사업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목표를 성취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단계별로 이어지는 로직모델과 비슷해 보이지만 outcome funding/management는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처음 예상한 비율의 사람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각 단계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과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많고, 따라서 조직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4. Targeting Outcomes of Program

목표 성과를 위한 실천적 체계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진행상황을 추적하게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처음 타게팅한 조건에 대비하여 얼마나 변화를 만들었는지 정도를 평가한다. 즉, 계획, 실행, 프로그램 평가에서 각 단계별 성과에 주목한다.



그림의 왼쪽은 프로그램 개발, 오른쪽은 성과(평가측정)과정이다. 오른쪽이 우리가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 일반적인 순서라면 기획은 거꾸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면, 즉, 사업은 자원(resource)를 투입하여 실행(activity)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많은 참가자의 수(Participant)와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Reaction)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사람들의 KASA(지식, 태도, 기술, 열정)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특정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취업을 한다던지,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던지) 이것을 practice라고 하는데 이 변화가 나아가 SEEC(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조건의 변화로 이어진다. 지역사회의 경기가 좋아진다던지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개발은 그것을 거꾸로 수행하면 된다. "지역사회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취업률을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얻고 취업에 대한 적극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배웠다는 성취감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방식이다.

TOP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같은 개념선상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비교적 사용이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한 두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상 비영리 성과측정의 4가지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짧은 지면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만 살펴보았지만, 이 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관점에 주목하여, 지역복지기관의 성과측정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출처 : 아름다운재단 나눔지식블로그 (기부문화연구소)

복지칼럼

살기 힘든가



문종술 변호사

속도에 쫓기면 사는 것이 불안하다. 수없이 울려대는 전화벨소리에 당장 반응치 않으면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허둥댄다. 기회를 잡아야한다며.

가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생각을 골라서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중요한 일을 엄선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은 생각에서 밀어낸다.

살기 힘든가. 참으로 풍요로운 이 시대다. 풍성한 식료품, 과일이 상점마나 시천으로 널려 있고 몇 집 건너 입맛을 돋우는 식당 간판이 식욕을 유혹한다. 그런 풍요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은 결핍증에 시달린다. 과잉공급에 질려 숨을 못 쉬는 형국이다. 풍요로움을 외면하고 불평불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결핍의 시대를 지내온 좋은 경험이 있다. 그때는 모두가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필사의 노력을 하면서도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 짧은 시간에 풍요의 시대로 강산이 변한 것이다. 결핍의 시대에 인내하던 마음이 불평가득한 시대로 변한 것이다.

결과(성공)에 목을 매지 않고 가치지향적인 느림에 친하게 되면 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

우리는 생각(사상)의 자유가 있는 사회 환경에 살고 있다. 사람마다 자기생각이 옳다고 우기고 누군가 반기를 들면 바로 공격을 한다. 옳고 그름을 변론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남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참으로 조급한 시대다. 진실추구, 사실탐지는 사치로 치부되고 감정적이고 대응적인 반응이 사회분위기를 흔들고 있다.

전치인의 책임이 크다. 지식인의 책임이다.

빠름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느림은 우선 배척된다. 벱새가 벱새로 살면 안 되고 황새 흉내를 내야 하는 시대다. 그러니 느림에서 묻어나는 향기를 맡을 시간이 없는 것이다.

이제는 풍요속의 불만과 갈등의 해소에 나서야 한다. 빈곤탈출을 외치던 인고의 시절을 떠 올려야 한다. 풍요를 감사하기 정제함에서 불만을 잠재워야 한다. 좋은 것에만 만족하는 마음을 떨쳐내야 한다. 좀 모자라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없는 이웃을 배려하는 풍성한 마음을 키워야 한다.

둔해진 감각을 깨우쳐 가치 있는 삶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시작은 어렵게 보일지라도 시작만 하면 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깊은 생각 끝에 하는 시작의 힘을 말한다. 생각을 내일이 아닌 오늘에 맞춰 할 일이다.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내일부터 꼭 해야지 하는 내일은 거의 오지 않는 내일이다.

느림에서 시작하여 결과보다 가치에 마음을 두자. 작은 것에 의미를 두고 모자람에서 여유를 찾는 일이 시급하다.

인생은 그리 만만하지 않지만 조용히 음미하면 그 안에 풍성하고 감사할 것으로 가득 채워진 즐거운 현장이다.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사는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

내년 건강보험료 월평균 879원 올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월평균 879원 인상된다. 또 임신·출산 의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건강보험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올해 대비 0.9%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1.35%)보다 0.4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7630원에서 내년 9만8509원으로 87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8만5013원에서 8만5788원으로 765원 올라간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 몫(보험료의 50%)을 제외한 절반만 내면 되므로 내년도 실제 납부액은 월 4만9254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가입자 측과 '의무수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격리 수가를 신설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고려해 인상폭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3500억 원을 투입해 임신·출산, 신생아, 고액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이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된다. 9월과 10월에는 1인실 분만과 임신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항암제를 포함한 고가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결핵 치료비 역시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경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사회복지 시설이다. 1950년도에 전쟁미망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모자보호시설을 설립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혼, 사별, 가정폭력, 미혼모, 미혼모자, 조손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주요사업

· 주거제공 · 생계지원 · 학비지원 · 의료급여
· 자립지원 상담 및 교육 · 문화체험 및 캠프
· 상담프로그램(개별상담, 집단상담, 전문심리상담, 전문심리치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부산·경남지회 051-505-5653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등록가정(다문화포함) · 만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중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미혼의 임산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과 아동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입소기간	· 3년 이내 (1년 단위로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 1년 이내 (필요시 6개월 연장가능)	· 2년 이내 (필요시 1년 연장가능)
입소절차	1. 시설 직접방문, 전화, 인터넷 상담 2.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 담당자와 상담 3. 시,군,구 한부모가족지원 부서의 담당자와 상담 (부서명 : 가정복지과, 가족행복과, 여성아동가정과, 복지사업과등 부서명은 지역별로 상이함) ※ 입소는 상담자 거주지와 관련 없이 원하는 곳으로 입소가능		
관련시설	· 다비다모자원 051)244-2508 (서 구) · 마리아모자원 051)504-2456 (연제구) · 안 나 모 자 원 051)241-2421 (서 구) · 은 애 모 자 원 051)241-1133 (서 구) · 청 학 모 자 원 051)403-6515 (영도구) · 한 나 빌 리 지 051)293-3800 (사하구) · 희 망 모 자 원 055)336-2121 (김해시) · 신 애 원 055)649-1020 (통영시)	· 마리아모성원 051)253-7543 (서 구)	· 마리아모성의집 051)255-7543 (서 구) · 희 망 샘 051)621-7020 (남 구) · 사 랑 샘 051)621-7003 (남 구)

기획 특집

국민연금 적정성 논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본래 목적한 노후의 생활보장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지에 대한 담론은 사라지고 소득대체율만 축소되어온 현실에서, 노인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호 기획특집에서는 지난 6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내고 덜 받겠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보다 더 큰 화제를 모은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다. 향후 45년 후 노후생활을 담보할 국민연금 재정은 바닥 날테고, 후세대가 이를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세금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10%p 올리자는 여론에 대한 정부의 반박이었다. 공무원연금 실무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분화'를 패키지로 제안했지만 정부는 연금 고갈을 앞세워 대립가을 세워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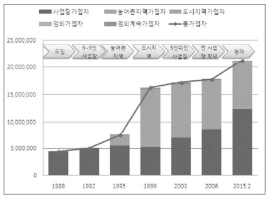
어찌됐든 험겨루기 과정을 거치면서 5월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공무원연금법 최종 합의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문화를 두고 절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단서조항이다. 앞으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올 10월까지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앞으로 국민연금 논의의 핵심 과제는 노후의 적정 연금 수준을 밝히는 일이다. 정부가 쌍수를 들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한 데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급속도록 진행됨에 따른 기금 고갈의 우려에서다. 앞서 예측되는 어려움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 '용돈' 수준인 국민연금을 노후생활 보장 기반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도 동시에 고려되지 않고서는 국민연금 분래의 의미는 지난 개혁과정에서 봐왔듯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 '재정 안정성'에 집중, '사각지대' 논의 후퇴

국민연금이 단기간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연금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기여형 연금이긴 하나, 낸 돈보다 후대에 더 받게끔 설계되었다는 점에 있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분배'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높아 '세대 내 분배' 기능도 높은 명실상부한 공적연금으로 자리하고 있다. 1988년에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은 올해로 27년을 맞이한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공적연금 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오면서, 2015년 2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23만8612명이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당시에는 443만 명에 불과했으나, 1992년에 5~9인 사업장 적용으로 확대되면서 502만 명으로 증가했다. 1995년 농어촌지역으로 가입으로 확대되면서 749만 명에 이르렀고, 1999년 도시지역 적용되면서 1,626만 명으로 급증했다. 2003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1718만 명, 2006년 전 사업장 적용으로 확대되면서 1773만 명으로 늘어나 현재의 규모에 이르렀다(그림1 참고).



〈그림 1. 국민연금 총 가입자 추이〉

출처 : 국민연금, "국민연금 공표통계안", 2015. 04. 참고 재구성
주: 사업장가입자는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가입자는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5세까지 가입을 신청한 자.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연금의 재정 불안은 주요 화두였다. 도입 초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에 주안 한 듯 했으나, 이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집중되었다(표1 참고).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구성되면서 1998년 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모색되었다. 이 시기에는 농어촌지역으로 연금이 확대된 이후 도시지역으로 확대할지 여부와 국민연금 도입 10년을 맞으면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가 관건이었다.

1998년 1차 제도개혁에서 주요 과제는 자영인 등으로 확대하는데 적절한 제도가 무엇인지, 재정불안을 해소할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현행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며, 지급연령을 65세로 조정하는 안으로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 시점을 2036년으로, 기금소진시점도 2047년으로 연장했다는 자평이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5년마다 연금 재정을 전망할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2003년 처음 시작되었다. 1차 재정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중점이었다. 이에 발전위원회에서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 15.9%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고, 도시지역으로 확대하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도입 등 제도보완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대안 없이 재정안정화만 추진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2007년 2차 제도개혁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전에 제안된 사각지대 해소 제안에다 덧붙여 기초노령연금(노인의 70%, 급여수준 A값의 5%, 2028년까지 10%로 인상) 도입하면서,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이에따라 재정수지적자시점을 2044년으로, 기금소진년도를 2060년으로 연장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도 2차 때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제안했다. 이는 65세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A값)과 연동해 5%로 지급할 것으로 설계되었고, 장기적으로 10%로 올리는 안이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에 폐지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약속한 기초노령연금은 사라지고, 낮은 물가인상과 연계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애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적인 공적연금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게다가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후퇴된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구분	1998년 제1차 제도개혁	2003년 제1차 재정계산	2007년 제2차 제도개혁
주요내용	· 주요 과제는 자영인 등 도시 주민으로 확대 적절한 제도, 기금 및 재정불안 · 5년마다 연금재정 전망할 재정계산제도 도입	· 재정계산 첫 시작 · 1차 재정계산 · 어떤 재정 상태를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가 핵심	· 최대 쟁점인 사각지대 문제
논의과정	· 기존 비례연금을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으로 전환, 보험료율 12.65%로 인상(2020년까지), 급여수준 40%로 인하, 지급 개시연령 65세로 늦춰(2033년까지)등 제안	· 2070년경 기금적립배율 2배 유지를 재정목표로 함의 · 재정안정화 방안 제시	· 최대 쟁점인 사각지대 문제
결과및평가	· 도시지역 주민으로 확대 결정 · 급여수준 60%로 하향조정 보험료율 9% 유지, 지급연령 65세로 단계적 조정 · 제정수지적자시점 2023→2036, 기금소진시점 2033→2047 연장	· 발전위는 소득대체율 60%→50%로 인하, 보험료율 15.9%로 인상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도입 등 제도보완 제시 ·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대안없이 재정안정화만 추진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장기간 교착상태	· 소득대체율 60%→40%로 인하, 보험료율 현행 9% 유지 · 사각지대 해소 제도보완안에 더해서, 기초노령연금(노인의 70%, 급여수준 A값의 5%) 도입 · 재정수지적자시점 2036→2044년 기금소진년도 2047→2060년으로 연장

〈표 1. 국민연금 개혁 과정 요약〉

출처 : 이용하, "제3차 재정계산(2013)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의 추진방향" 한국응용경제학회, 2012 정리

국민연금 둘러싼 최근 쟁점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18~59세 전체 인구 2262만 명 중 절반만이 노후에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68.6%이며, 공적연금 적용자는 66.9%로 특수직역연금 142만명(4.3%)과 국민연금 적용대상 2062만명(62.6%) 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는 1498만명으로 45.5%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경제활동인구 1034만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57만명, 납부예외자 457만명, 장기체납자 106만명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의 50.2%다. 다시 말해 국민 2명 중 1명이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그림2 참고).



〈그림 2. 국민연금 가입실태〉

출처 : 국민연금, "2013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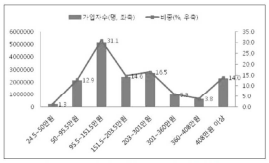
지금까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많은 논의들이 이어져왔다. 끊임없이 제안된 해법은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도입, 납부예외사유 축소 등이었다. 그러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노동시장정책과 연계되지 않고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한계에도 국민연금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기업과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금의 기초연금을 손보자는 제안이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노인에게 주도록 보편성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지급액도 높여가자는 논의가 한 축의 대안이다.

지금까지 제도개혁 과정에서 재정을 탄탄히 가져가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는 안들은 많았지만, 한번도 실행된 적은 없다. 과거 논의에서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60%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9.85%까지 인상, 50%로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은 15.85%까지 인상, 40%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 11.85%까지 인상하는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현행 보험료율 9%보다 3%~11%p는 더 올라야 연금의 급여수준 인상이 가능하다는 설계다. 다시 말해 현재 200만원 월급자가 매달 9만원 내던 보험료에서 30만원에서 11만원은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막상 보험료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사업장은 이에 대한 저항감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95만 5000원 미만 소득 가입자가 전체의 14.2%이며, 95만 5000원에서 151만 5000원 소득구간 내 가입자가 31.1%나 된다(그림3 참조). 영세자영업인이나 저임금 층에서 노후 준비에 더 돈을 쓰는 데 탐정의 생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서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이들의 연금 이탈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림 3.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구간별 비중 현황〉

출처 : 국민연금, "국민연금 공표통계안", 2015. 4. 참고 재구성

그러나 최근 정부와 최전선에서 대립각을 세워온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김 교수가 보건복지부에 소득대체율을 10%p 인상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례한 결과 보험료율 1% 인상만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물론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전제했을 때다. 김 교수 역시 이 시점부터는 보험료율의 단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긴 하나, 정부의 입장처럼 2100년을 내다보고 기금을 적립해 나온 보험료율 18.85%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적정 연금, 노후 최소 생활은 보장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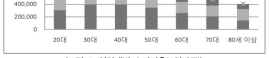
현재 실제 받는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인가? 현행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한 경우 2000만원 소득자는 40년간 연금을 낼 경우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24년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적어 실질소득대체율은 48만원에 불과하다(표2 참고).

	소득대체율 40%	소득대체율 50%
명목소득대체율 적용 (40년 가입시)	80만원	100만원
실질소득대체율적용 (평균가입기간 24년 적용)	48만원	60만원

〈표 2.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 격차〉

출처 : 김연명,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2015.5.12. 새민을.
주 : 생활보장소득 B값이 전체가입자 평균소득 A값(2000만원)과 같은 평균소득자 기준(2015년)

그럼 이 연금으로는 노후생활의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새사연 이슈진단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2015.6.15.)에서 노인 세대의 소비지출을 계산해 분석해보았다. 실제 받는 국민연금 48만원으로는 현재 노인세대의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60대 1인가구의 소비지출비는 총 84만원이다. 이들의 기본 생활비인 식료품에 26만 3863원, 주거에 17만 2870원, 보건에 9만3940원을 지출해, 식주거보건비에 총 53만 673원이 소요된다. 이는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48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인데다, 60대 1인 가구 소비지출의 57%밖에 감당하지 못해 그 한계가 명확하다(그림4 참고).



〈그림 4. 연령대별 소비지출(1인가구)〉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로 분석한 이정아,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새사연 이슈진단, 2015.6.16.

연령대를 60세 미만과 60세 이상으로 나눠 가구형태별로 소득과 지출도 비교해봤다. 한 눈에 보기에도 60세 이상은 60세 미만 세대와는 가구형태와 무관하게 경상소득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져 있다. 60세 미만 1인가구의 경상소득은 216만원 1597원인데 반해, 60세 이상 1인가구의 경상소득은 88만 38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보니 소득 대비 지출 비중에서도 60세 미만과 이상 세대들 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60세 미만의 1인가구의 총 소비지출비는 134만 7125원으로 소득 대비 62.3%인데 반해, 60세 이상의 총 소비지출비는 70만 9094원으로 소득 대비 80.6%에 달한다. 소득 대비 식주거보건비를 비교해보면, 60세 미만의 1인가구는 68만 6247원을 지출해 소득 대비해 31.7%를 쓰는데 반해, 60세 이상의 1인가구는 식주거보건비에 총 48만 1816원을 써 소득 대비 54.7%를 지출하고 있다.

이처럼 가구형태별로 차이는 있지만, 60세 이상 세대들은 경상소득 자체가 낮다보니 지출 비중이 높고, 이

웃는상사 밝은동료
알고보니 교육이수

2015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대 상 부산지역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3,600명
일 정 3월 ~ 11월
시간/평점 연간 8시간 / 8평점
장 소 부산) 거제종합사회복지관 3층 세미나실
교육내용 각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약 56회 개설 예정

교육내용 영역기준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Social Work Ethics & Values) 영역
- 사회복지인권(Social Work Human Rights) 영역
-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Issues and law of Social Welfare Policy) 영역
-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 영역
-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영역
- 사회복지조사연구(Social Work Research) 영역
- 특별분야(Special Field) 영역

※ 필수영역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영역, 사회복지실천 영역 중 1영역 이상 1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
※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수

수 강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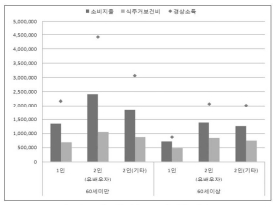
구 분	일반(1일 8시간)	특화(2일 16시간 이상)
수강료	- 부산 소재 기관 근무자 8평점 20,000원 - 타 지역 기관 근무자 8평점 48,000원	- 부산, 타지역 기관 근무자 8평점 120,000원

※ 2015년 보수교육 시 식사제공 안됨
(단, 2014년 또는 2015년 연회비 납부자에 한해 식사비 현금 지원)
※ 부산시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일부 지원에 따른 교육비 할인은 계속됨

신청방법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에 개인ID/PW 로그인-보수교육 신청
※ 교육신청은 온라인(edu.welfare.net)에서만 가능
※ 교육비 납부 여부 및 교육관련 공지는 수강자 핸드폰으로 연락하오니 연락처 확인 요망
※ 3분기(7월~9월) 교육신청은 6월 3일(수)부터 가능합니다.

문 의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매니저 임정환(☎ 051-507-1285)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BUS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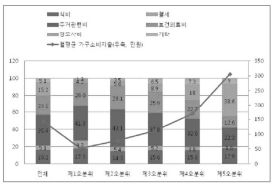
〈그림 5. 가구형태별 소득과 지출 비교〉

출처: 통계청'가계동향조사,2014년 원자료로 분석한 이정아,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새사연 이슈진단, 2015.6.16.

가운데 최소한의 생계비인 식주거보건비 비중이 높다. 60세 이상 세대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 이외의 지출 여력이 현저히 낮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그림5 참고)

2014년에 실시한 노인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소득이 낮을수록 기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노인의 월 평균 가구소비지출은 143만 9000원인데, 식주거보건비에 114만 8000원을 지출해 이 비중이 전체 소비지출의 80%에 이르고 있다. 특히 소득 1분위, 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비지출비가 각각 52만 1000원, 78만 6000원인데, 이들의 식주건보건비는 49만 2000원과 71만 4000원으로 비중이 각각 94.5%, 90.9%에 이른다. 즉, 현 국민연금은 소득 1, 2분위 노인세대의 기본생계비도 책임질 수 없는 공적연금인 셈이다(그림6 참고).

노후 소득의 자원에는 일자리나 모아둔 자산을 포함할 수도 있으나, 이를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적



〈그림 6. 노인(65세이상)의 월 평균 가구소비지출과 지출항목별 비중 (단위:만원, %)〉

출처 : 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2014.

연금의 적정성 논의에 넣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 노인의 소비지출을 중심에 놓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적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시작하는 게 타당하다. 새사연은 성인1인의 최저생활비용으로 144만 1996원을 계산해냈다. 이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나온 노인 전체의 월평균 가구소비지출비 실태조사 결과와도 매우 근접해, 노인 세대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수준에도 부합한다.

이제까지 국민연금의 세정 불안은 태생적인 한계처럼 지적되어왔다. '적게 내고 더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은 고령화지출산 추세대로라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은 국민연금 탄생 이후 27년간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받아 왔다. 그렇다보니 지금까지 국민

연금의 제도개혁이나 재정계산 과정은 애초 설계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들이었다. 이때마다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정치권 내 파장은

	성인1인(핵심연령대 만25~54세)
식료품비	348,113
주거비	541,038
보건의료비	101,259
양육비	0
교통비	116,836
조세	102,075
기타	232,075
최저생활비용	1,441,996
시간급 환산 (주 40시간 전일제 기준)	6,914

〈표 3. 성인1인의 최저생활비용〉

출처 : 새로운사회를꿈꾸는연구원,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2015.4.21.

주 :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MIT에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임금가구의 생활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응용 설계한 모형Basic Needs Budget에 기반해 적정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해 추산.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그럼에도 재정 불안이 속 시원히 해결되지는 못했다. 정작 중요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버리기만 했다. 국민연금이 본래 목적한 노후의 생활보장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지에 대한 답론은 사라지고 소득대체율만 축소되어왔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노인 빈곤을 멈추기 위한 적정선,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적정선 논의를 노인의 현실에 기초해 시작해보기를 제안한다.

출처 : 최정은 연구원(새로운사회를꿈꾸는연구원)

*"국민연금 적정성 논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2015.03.9.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사회복지계 대응방안 필요

▸1면 사진에서 이어짐

1. 사회복지계의 대응 관련 조사결과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5. 6. 16(화) ~ 18(목) / 3일간
조사대상 : 10개 사회복지 직능단체(277개 기관)

가. 거의 대부분(99%)의 사회복지기관들이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과 메르스 관련 안내자료를 기관 내에 비치하였으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는 등의 지자체 권고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재종항목 / 직능구분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메르스 안내자료 게시	직원 행동지침	주요 행사 취소	영시적 폐쇄	Total(%)
아동시설	182	182	60	138	29	
생활시설	85	75	73	73	9	
기타	8	8	2	6	1	
Total	275	243	135	217	39	
(%)	(99.3)	(87.7)	(48.7)	(78.3)	(14.1)	

〈자료 1)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메르스 예방법(중복체크)〉

나. 특히, 전염병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관들이 신속히 대응하여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는데 힘썼음. 특히, 메르스 발생지역인 사하구와 남구, 수영구 등과 그외 지역 간의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기관의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구역 / 직능	양방향응답 (1)	손소독제 (2)	일회용 장갑구비 (3)	영화기기	해당 없음	(1)과 그 이유 (복수 기입)
중구(7개소)	7	7	1	3	100.0%	
서구(21개소)	21	21	7	7	100.0%	
동구(12개소)	12	12	5	5	100.0%	
영도구(15개소)	15	15	10	2	100.0%	
부산진구(19개소)	19	18	3	6	97.4%	
동래구(26개소)	26	25	10	14	98.1%	
남구(21개소)	20	20	8	12	100.0%	
북구(19개소)	19	18	2	13	97.4%	
해운대구(27개소)	27	27	10	13	99.4%	
사하구(16개소)	16	14	8	6	93.9%	
금정구(22개소)	21	22	8	10	97.7%	
강서구(11개소)	11	11	3	5	100.0%	
연제구(17개소)	17	16	6	10	97.1%	
수영구(10개소)	10	10	4	3	100.0%	
사상구(20개소)	20	14	4	11	85.0%	
기장군(12개소)	11	10	3	4	98.5%	
Total(%)	277(98.2)	266(93.9)	90(33.2)	125(45.1)	-	

〈자료 2) 각 지역별 기관 내 구비되어 있는 위생용품(중복체크)〉

다. 그러나, 메르스 확산을 위한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에 비해 이를 위한 신속하고도 충분한 지원체제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위생용품에 대한 지원의 수요는 상당히 높았으나,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긴급상황이라는 신속성 때문에 자부담을 통해 구매한 곳이 82.3%였으며,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여 구매한 곳은 19.2%, 지자체가 전액 지원한 곳은 7.0%로 나타남.

공공이 전액이든 일부든 지원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25.6%에 그침.

구분/구분	계약업	직접제 일부지원	직접제 전액지원	기타 (우영 등)	공공지원 비율
아동시설(184개소)	141	45	18	13	34.2%
생활시설(85개소)	75	1	1	7	8.2%
기타(8개소)	7	0	0	1	14.2%
Total(%)	223(82.3)	52(19.2)	19(7.0)	21(7.7)	25.6%

〈자료 3) 위생용품 구비를 위한 재원(중복체크)〉

라. 공공에서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지원하는 위생용품 구매 지원은 영영별·유형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남. 특히 모자 및 미혼모 시설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상담기관과 같은 여성복지 관련 시설의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또한 아동생활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기주인들의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시설에는 위생용품의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과 같은 이용

구역 / 직능	계약업	일부지원	전액지원	기타	1) 그 이유 (중복가능)
장애인복지관(12개소)	11	2	0	1	8.3%
노인복지관(23개소)	18	11	4	0	32.6%
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16개소)	5	0	1	2	6.25%
아동양육시설(21개소)	19	3	0	2	7.14%
장애인주거생활(6개소)	6	0	0	2	0%
정신요양시설복지(13개소)	8	3	1	1	15.38%
장애인시설(44개소)	38	5	3	0	9.1%
재가노인복지시설(4개소)	2.8	1.6	4	3	23.8%
지역자원개발(7개소)	6.1	1.1	6	9	10.9%
노인요양시설(29개소)	27	1	5	7	1.7%
Total(%)	223(82.3)	52(19.2)	19(7.0)	21(7.7)	-

〈자료 3) 위생용품 구비를 위한 재원(중복체크)〉

시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마. 메르스로 인해 5월 ~ 6월 사이에 계획이 되었던 사업과 행사들이 취소 또는 연기가 되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도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임.

① 각종 사업 또는 행사의 연기로 인한 위약금 발생(위약금 발생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어 결국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 불가피한 상황임.)
② 자격요지 또는 이무교육이 필요한 상황에 시기를 놓쳐서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
③ 사업의 연기로 인해 하반기 업무추진에 큰 지장 초래
④ 정기적인 자원봉사자나 후원자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2.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한 발전적 방안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 전세계적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이러한 전염병 사태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①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전염병에 취약한 세대들이 많으므로 이들을 위한 위생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예 : 적십자 같은 구호단체에서 상당량의 위생물품 등을 미리 구비해 두고, 긴급상황 발생시 일부라도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
② 부산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위생물품 지원을 위한 긴급 예산편성을 통해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지원하고, 영역별로 지원의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정하는 역할 필요함.
③ 전염병이나 국가적 재난 관련 매뉴얼 또는 안내정보를 민간과 즉시 공유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신속하게 전파하는데 협력할 필요가 있음.
④ 전염병 또는 국가적 재난과 관련한 대처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기관에 주기적인 직원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예 : 연1회 보건소에서 전염병 확산 발생시를 대비한 모의 훈련이나 교육 실시)

현장의 소리

부산진역자활센터 조상미 과장을 만나다!



Introduction

혹시나 누군가의 입에서 희자되더라도 "아! 그 친구,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은 사회복지사 조상미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부산진시역자활센터에서 총무과장으로 새식 중인 두자녀의 워킹맘입니다. 우연히 시작된 사회복지사의 길을 걸으며, 소심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때론 이기적인 성향이 강했던 예전의 모습에서 조금씩 탈피하며 변해가는 제 자신을 느낄 때 사회복지사라는 소명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활사업을 통해 참여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더욱 나은 내일을 위해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이 순간들이 정말 행복합니다.

Work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고취시켜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빈곤 정책사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며 사회복지 현장의 부명성 및 윤리적 경영의 최 일선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업은 자활사례관리팀장의 역할이며, 요즘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제공과 적절한 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지립을 지원하는 자활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히를 계기로 지난시간을 뒤돌아보니, 올해는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서 제가 자활사업을 시작한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전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간병사업단 팀팀자로서 어머니 같은 침어주민들과 함께 부딪치고, 깨어지고, 넘어지면서도 지역사회 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거리를 제공하고, 참여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만들어 왔던 간병(돌봄)사업 관련 4개의 자활기업은 제 인생에 있어 영원한 자긍심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Knowhow

자활사업을 흔히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 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와 담당자의 변함없는 복지마인드와 더불어 사업단 및 자활기업 경영마인드가 결합되어야만 자활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기본적인 역량강화와 더불어 경영과 경제에 대해 학습하고 준비하시 않으면, 사활사업 현장에서 사신의 입지를 굳히고 참여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경쟁력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을뿐더러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영양분을 주고 보살펴야 제대로 성장한다는 말처럼, 매순간 진정성을 갖고 역할에 충실 한다면 좋은 일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pisode

10년 전 이맘 때 저도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없을 즈음 만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남편은 빈혈과 폐수술, 시각장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본인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여성 참여주민들은 대체로 간병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초교육과 실습이 끝나면 병원에서 바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병원에서 일을 한지 일주일이 지나자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때 선임이 전해준 이야기 "비를 맞고 있는 누군가에게 우산을 받쳐줘도 좋겠지만, 그 비를 함께 맞아주면 좋겠다." 라는 충고를 받아들였고, 저는 보름이 넘게 매일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며 간병사와 함께해, 어느덧 간병사도 현장에 잘 적응하여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분은 결국 시간이 흘러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참업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취득하여 현재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분과 인연이 되어 작은 소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만뒀으면 어쩔 뻔 했냐고..." 우스갯소리를 하십니다. 자녀들도 올바르게 키워냈고, 본인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고, 이런 과정을 함께 했다는 것이 지금도 설레고, 감사하기도 하고, 가끔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Special

사회복지는 활동 영역이 다양하고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7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말에 100% 공감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어 보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더욱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길 기대해봅니다. 더불어 마야 안젤루(Maya Angelou)가 말 했듯이 불평하지 말고 내가 변화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에 대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힐링 방법으로 여행을 즐깁니다. 비록 아이들 때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국내든 국외든 기회만 된다면 많이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여행을 통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업무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 노수연 사회복지사

2015년 제5차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요원 신규 양성교육 안내



· 일 시 : 2015년 7월 21일(화) 13:00~17:30
· 장 소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403호
· 대 상 : 사회복지 및 관련 분야 소속 자원봉사 관리 담당자 50여명(기관당 1명만 신청)
·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http://www.bswin.net) '교육행사신청' 게시판 온라인 접수
· 교 육 비 : 3만원(부산은행 074-01-025120-8 /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 문 의 :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최동규 사회복지사(☎ 051-506-6633)

※ 해당 교육은 신규로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 받고자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므로, 보수교육과 구분하여 신청 바랍니다.

우수프로그램

'Seeds of truth, 기발한 아이디어로 환경문제에 대응하다'
〈TRUTH COFFEE〉의 컵 & 슬리브 그린디자인



최근 몇 년 사이 커피 문화가 매우 활성화 되면서, 커피를 판매하는 점포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5월을 기준으로 부산에 있는 커피전문점만 3,028개로 나타났고, 여기에 커피를 판매하는 다른 업종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이다.

뜨거운 커피 사랑에 매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의 양도 엄청나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해 버려지는 일회용 컵의 수가 230억 개에 달한다고 한다. 20세 이상 성인 인구수를 4,000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성인 1명이 1년에 575개의 일회용 컵을 쓰고 버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인 1명이 하루에 적어도 일회용 컵 1~2개는 소비하는 셈이다. 머그컵이나 텀블러 같은 다회용 컵을 사용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버려지는 수많은 일회용 커피 컵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회용 커피 컵을 제작하는데 엄청난 나무가 베여지고, 다 쓴 컵은 자연에 버려져 분해될 때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일회용 커피 컵은 오늘날 환경파괴의 주범이라 감히 말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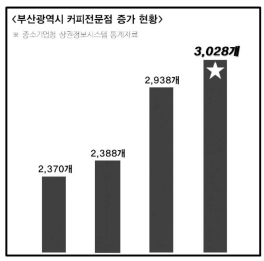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TRUTH COFFEE'는 엄청나게 버려지는 일회용 커피 컵 문제를 해결 하고자 아이디어를 고안 해 냈다. 디지털광고 에이전시인 'NATIVE'와 합작으로 100%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회용 컵과 슬리브를 만든 것이다. 흙에서 생분해 되는 컵은 이미 만들어졌던 것이라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재밌는 것은 바로 슬리브이다.

생분해성 슬리브에는 곳곳에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 잡기 편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독특하게도 허브의 씨앗들이 박혀 있다. 이 슬리브가 버려지지 않고 식물로 재탄생 되며, 커피 컵과 함께 자연으로 100% 돌아가는 착한 그린디자인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컵의 사용법은 간단하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난 뒤 커피 컵을 버리지 말고 슬리브와 함께 겹으로 가져간다. 커피 컵에 슬리브를 구겨 넣고, 흙을 채운 다음 주기적으로 물을 주면 슬리브에 박혀있던 씨앗이 싹이 되어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요소가 하나 더 있다. 커피와 함께 제공되어 커피를 젓는데 사용했던 일회용 나무 스틱에는 허브의 이름이 적혀있어 피켓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허브가 많이 자라면 컵을 통째로 넓은 곳에 옮겨 심는다. 이로써 버려지는 것 없이 컵, 슬리브, 스틱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1분마다 1백만 개의 일회용 커피 컵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된다고 한다. 더불어 슬리브 또한 엄청난 양이 버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 해 볼 때 'TRUTH COFFEE'의 컵과 슬리브는 환경 문제를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로 극복해 보려는 대표적인 그린디자인 사례다.

물론 커피 컵 제작비용이 어느 정도 상승하기도 하겠지만, 거대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들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야 하겠다. 커피 값만 올리지 말고 말이다.





글 : 강영기 사회복지사

※ 본 기사는 특정기업의 광고성 글이 절대 아님을 알립니다.

공감

워킹맘 소아과의사가 말하는 육아대화의 기술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7단계 대화법』
최유경 지음



이 책에서 소개하는 대화법은 자녀를 '부모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아이 말을 잘 들어주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책은 소아과 전문의인 저자 스스로 아이들에게 쓰는 대화의 방법을 바꾸면서 아이들이 보여준 세세한 변화와 생생한 경험담을 담고 있다. 저자의 아이들은 지금 다섯 살, 여섯 살이다. 자기 아이와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자신 있게 말한다.

저자는 병원에서 많은 어머니들의 육아고민을 들으면서 느낀 현실적으로 유용한 양육법들도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첫돌 지난 아이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자신도 이 책에 소개하는 대화법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고 고백한다. "나 역시 책을 쓰면서 읽고 실천하고 반성하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을 한 번 읽는 것으로 대화패도가 확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저자는 미리 말한다.

그러나 부모에게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책은 강조한다.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모는 자신의 언어습관을 바꾼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러한 보람이 부모의 언어습관을 계속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저자가 추천하는 아이들과 공감하는 대화법은 모두 다음의 7단계로 나누어진다. 이를 세분화하면 아이의 공감능력을 키워주는 대화원칙으로 (1)속마음을 드러내기 (2)부탁하기 (3)마음을 읽어주기의 세 단계가 있고,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형 대화원칙으로 (4)질문하기 (5)칭찬하기 (6)안된다고 말하기의 세 단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아이의 창의력을 강조하는 대화원칙인 (7)상상하기가 있다.

저자는 7가지 대화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을 첫 번째 단계인 부모의 속마음을 아이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부모가 아이의 맡에 공감해 준다는 것은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해 주는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은 부모가 아이의 뜻만 일방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로, 아이의 마음을 억지로 읽으려고 들면 부모와 아이 사이에 공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와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모와 서로의 감정과 바람을 교환하는 대화로 어렸을 때부터 기반을 다져둔 아이는 사춘기를 겪어도 부모와 커다란 충돌 없이 자신의 격동적이고 섬난 감정의 파도를 무난히 잠재울 수 있으며 부모와 계속 소통의 맥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저자는 확신한다.

햇볕을 찾아서

너, 나 그리고 우리, 따스함에 '동화'되다
동화마을 봉사단





여느 때처럼 찬바람이 매섭던 2015년 2월,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의 문이 열리고 네 명의 대학생들이 쭈뼛거리며 인사를 하며 들어왔다. 동의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생들이 모여 봉사단을 창단하려고 방문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만난 네 명의 대학생들은 각자의 가슴 속에 담아뒀던 온기를 보여주었고 '동화마을 봉사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 이후 처음 시작한 활동은 부족한 점이 꽤나 많았다. 인원도 충분하지 않았고 조직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처음 가졌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꿈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되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우에 불과했다.

처음 진행한 활동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화학공학에 대한 지식 멘토링과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이었다. 그리고 생활용품을 직접 제작하여 인근 경로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렇게 점차 여러 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다 보니 주위가 가시고 꽃이 고개를 내밀 즈음엔 단원 50명이 넘는 비교적 큰 봉사단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동화마을 봉사단'은 커진 규모와 함께 멋진 추진력으로 활동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었다.

동의대학교 소속 '동행전공봉사단'에서부터 시작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부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소통고리 봉사단'에 선정되어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나눔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재능나눔 봉사단' 활동으로 농촌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물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동화마을 봉사단'은 약 4개월 간 정신없이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화마을 봉사단'은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도움의 손길을 나누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함께 소통하는 등 부산진구의 구석구석을 살피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봉사단원 개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청년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배려와 나눔을 몸소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온기로 감싸 안아 함께 '동화(同化)'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키울 것이다.

이렇게 '동화마을 봉사단'이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적극적으로 활동해준 단원들과 여러 기관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이었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멋지게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직 가야할 곳이 많기에 오늘도 걸음을 재촉한다. 더 많은 곳이 따스함에 '同化'될 수 있도록…

글 : 동화마을 봉사단장 이진규

규격 및 면별		크기(mm)	단가(만원)
5단	1면(컬러)	400 × 180	50
	7~8면 (컬러)		40
	3~6면 (흑백)		30
1/2 단	7~8면 (컬러)	200 × 180	20
	3~6면 (흑백)		15
1/3 단	7~8면 (컬러)	130 × 180	15
	3~6면 (흑백)		10

※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부산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부산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및 지역오피니언,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부산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노수연 사회복지사(T.051-506-6633)

사진으로 보는 부산사회복지 소식



부산시민복지기준 수립을 위한 100인 시민원탁회의 6월 29일(월)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민복지기준 수립을 위한 100인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연금 부산지역본부의 '아름다운 토요일' 6월 27일(토)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아름다운 가게와 맺은 '뷰티풀 파트너'로서 불품 1천여점을 모아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오픈, 대리운전 앱 '원드라이버' 수익금 기부 6월 25일(목) (주)오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해 대리운전 앱 '원드라이버' 수익금의 5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



'마음으로 키우는 아이들' 전문위탁부모교육 실시 6월 9일(화)~11일(목)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는 센터 내 세미나실에서 3일간에 걸친 전문위탁부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권역, 성금 130만원 전달 6월 25일(목) 도로교통공단 부산권역 4개지부에서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위한 이웃사랑성금 13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장애아동들의 안전한 놀이터, 소프트놀이터 6월 1일(월)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은 넥슨커뮤니케이션즈와 BNK부산은행의 지원으로 장애아동재활프로그램을 위한 소프트놀이터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부산광역시새마을회, 네팔 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 6월 22일(월) 부산광역시새마을회는 부산광역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네팔 지진 구호를 위한 성금 1천88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연제고등학교 네팔지진 긴급구호 지원금 전달 6월 3일(수) 연제고등학교는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 봉사동아리가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네팔지진 지원금(42만원 상당)을 월드비전 부산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수영구주민복지대표단 '행복드림' 벽화작업 실시 6월 6일(토)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은 망미1동에 위치한 주택가 벽에서 수영구주민복지대표단 '행복드림' 2차 벽화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홈플러스 영도점 봉사단 사랑의 쌀 나눔행사 6월 8일(월) 홈플러스 영도점 봉사단은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영도구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20Kg 쌀 10포를 후원했습니다.



'독거노인친구만들기' 해운대 중등3지구 학부모회 업무협약 6월 10일(수) 어진생노인종합복지관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해 해운대 중등3지구 학부모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아동복지협회, 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희망키움 교육 6월 13일(토) 부산아동복지협회는 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아동양육시설 퇴소예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준비를 위한 희망키움 교육을 했습니다.



시스템 정리수납 기업 (주)덤인 사회공헌활동 협약 6월 10일(수)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영세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덤인과 사회공헌 활동 협약을 맺었습니다.



'살기 좋은 다대동 만들기' 주민교류회 6월 8일(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결성된 다대3지구, 4지구, 5지구 세 곳의 주민조직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교류회를 실시했습니다.



SK텔레콤 부산마케팅본부, 대리점 착한가게 캠페인 6월 25일(목) SK텔레콤 부산마케팅본부와 SKT 대리점 10곳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가게에 가입했습니다.

복지인사동정

부산시 인사발령자 명단(7월 1일 기준)

▶ 행정 5급
- 박중배 장애인복지과장
- 백희원 사회복지과(법인시설지원)
- 김정우 사회복지과(생활보장)
- 최부환 노인복지과(노인시설)

▶ 사회복지 5급
- 배일화 여성회관장
- 석정순 출산보육과(보육지원)

▶ 사회복지 6급
- 원세연 시의회사무처(팀장요원)

1004

지역사회봉사단, 아름다운 봉사 이야기



우리사회 '나눔문화'확산을 위한
「1004지역사회봉사단」을 모집합니다!

▶ 「1004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한 '봉사동아리'를 지역, 직능별, 보유역량별로 구분, "지역사회봉사단"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형 봉사활동을 지칭합니다.
※ 지역사회봉사단 기준 : 5인 이상의 봉사단체, 1년간 연4회 이상 지속 활동

▶ 1004지역사회봉사단 분야 : 기술·기능, 보건·의료, 문화·예술, 교육·학습, 상담·정보, 운영·지원, 노력·행정, 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별 봉사단체

▶ 자원봉사단체 혜택
- 지역사회봉사단 위촉(위촉장 발행 및 전달식 진행)
- 봉사단체의 보유역량을 반영한 맞춤형 봉사일감 부여
- 취업 및 입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실적인증서 발급
- 우수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각종 훈·포상 추천 및 표창 수여
- 우수자원봉사단 사례 홍보(다양한 매스컴을 통한 봉사단 소개)

▶ 1004지역사회봉사단 위촉 절차

봉사단 위촉 및 활동 신청 → 봉사단 위촉 →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준비 및 상담 → 봉사활동 참여 및 연계 지속 관리

▶ 문의
-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1004지역사회봉사단」 담당 최동규 사회복지사
T. 051-506-6633 / F. 051-506-6635 / E. bcsw1125@hanmail.net

사회복지사가 칭찬하는 사회복지사

17번째 사회복지사 – 동구노인복지관 정해선 사회복지사



사칭사(사회복지사가칭찬하는사회복지사)는 매월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됩니다. 부산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칭찬받는 그 날까지 쭈욱~

새로운 업무의 시작, 그리고 신설된 팀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들을 함께 겪고 큰 힘이 되어준 민상화 사무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칭찬할 사회복지사는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정해선 팀장님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근무를 하지만 사실 민·관 담당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민간기관의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기존의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관에서 주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자칫 관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민간 기관 담당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력해 가고자하는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민간기관 담당자 분들이 계셨고 그중에서도 정해선 팀장님은 오래전부터 함께 해 온 팀원 같은 분 이었습니다.

일상생활유지가 힘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재가 대상자들에 대한 신속한 문제 해결은 민간기관이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는 부분이며, 정해선 팀장님은 그러한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대상자 방문과 상담을 진행하고 지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업무들이 산재해 있다는 걸 알기에 그리고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시는 능동적인 사회복지사이며, 동구의 노인복지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회복지사 정해선 팀장님을 칭찬합니다.

글 : 법일동주민센터 감수경 주사

프로그램 안내

소재지	기관명	프로그램내용	진행일정	연락처
금정구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컴퓨터 교실,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051-523-0100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EQ쑥쑥' 동시와 율동, 블라블라 영어회화	문의	051-647-0136
동구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 취업알선센터, 직업적응훈련	문의	051-465-7064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문화복지 아카데미	문의	051-863-0650
동래구	사직클럽하우스	정신장애인 훈련프로그램 등	상시	051-503-6765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도형신리 2급전단 자격, 한글문서작성 실무	문의	051-503-7388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영화상영 '인싸동 소극장'	매주 화요일	051-522-1650
북구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여가프로그램	문의	051-362-7755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성인 노래교실, 무한청춘합창단	문의	051-331-4674
	화정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미술, 요가, 일본어, 등)	문의	051-362-0111
	장신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행복 두 배 다"	문의	070-4825-8410
서구	이미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인 이용 및 입소 프로그램	문의	051-244-2005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동화구연교실교육 및 지도사 자격증 대비	문의	051-253-1322
수영구	부산농협사회복지센터(로사)	수영구 독책장난감도서관	분의	051-758-4445
	부산기정위탁지원센터	메바위하부모 모집 "마음으로 키우는 아이들, 기정위탁"	문의	051-758-8801
	수영구노인복지관	수영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프로그램	문의	051-759-6070
	부산여성특력예방상담소	성기정폭력 무료상담 및 법률지원	상시	051-753-1377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스토리텔링 등	문의	051-507-8173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용 수동휠체어 지원 사업	문의	051-780-6195
영도구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 &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P/G 등	문의	051-404-5061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문의	051-403-6418
중구	중부산기정폭력상담소	기정폭력 무료 상담 및 법률지원 등	문의	051-462-7177
해운대구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유료심리검사	문의	051-782-5005
	해운대지역아동센터	꾸러기체육(결식아동청소년 결식예방)	문의	051-782-5005
	어선생노인종합복지관	맞춤형 성담실무교재검사, 법률상담, 등)	문의	051-784-8008
	송국클럽하우스	성인정신장애인 정신사회재활, 직업재활, 가족상담 등	상시	051-747-0578

자원봉사자 모집

소재지	기 관	봉사활동분야	문 의
강서구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배식, 공부방 프로그램보조, 환경개선 등	051-271-0560
금정구	금정구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활동지원, 행정지원, 시설보조 등	051-523-0100
동래구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적응훈련 보조 등	051-522-1650
부산진구	부산진구노인복지관	노인자원봉사단(교통지도, 뜨개, 급식 등)	051-808-8090
	부산시노인취업교육센터	교육지도, 지역공헌 등	051-861-0995
북구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대학 국수제공 보조	051-331-4674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독거장애노인 심리정서지원 '다섯손가락'	051-362-0111
사상구	사상구장애인복지관	한글교실 유급 지원봉사자	070-4261-8114
사하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목욕보조서비스	051-264-9033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실 업무 보조	051-262-2461
	한나빌리지	컴퓨터교실조력, 아동 프로그램 및 행사 보조	051-203-3800
수영구	부산농협사회복지관(로사)	청소년 지원봉사(교육, 기정방문, 환경미화 등)	051-755-3357~9
	상락정양주출	목욕봉사, 급식봉사, 어르신활동보조	051-756-1883
	해누리노인복지공동체	재가봉사 및 기타봉사	051-751-7272
	수영구노인복지관	수영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	051-759-6070
	부산여성특력예방상담소	상담업무 보조, 캠페인	051-753-1377
연제구	(사)부산맹봉사회서비스센터	행정보조(산모바우처, 간병, 교육 등)	051-852-0540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은나래실버센터, 경로식당 등	051-507-8173
영도구	와치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급식서비스 조리 및 배식	051-403-4200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051-404-5061
해운대구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독거장애노인우울감소프로그램(해피실버)	051-545-0115
	어진생노인종합복지관	발달지유사 지적장 소지자방문 및 치유활동)	051-784-8008



(주)대주애드 도서출판 다찬
신문/카다록/사보/포스터/카렌다
광고기획/도서출판/편집
TEL:803-6631 FAX:803-6629

제6회 장애인식개선 '열손가락' 영상공모전 개최



사상구장애인복지관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6회 장애인식개선 열손가락 영상공모전'을 펼친다. 이번 장애인식개선 영상공모전은 '열손가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열손가락은 손가락 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각각 다른 모습, 다른 역할, 다른 개성으로 살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더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공모전 접수는 지난 6월 22일부터 시작돼 오는 7월 31일까지 받고 있으며, 9월 5일 제6회 장애인식개선 '열손가락' 영상공모전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의 영상 제출 형식은 동영상, UCC, 플래시, 애니메이션(AVI, WMV, ASF, MPG, MOV, FLY 파일 등)이며, 분량은 편당 30초에서 5분 이내로 제작하면 된다.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상구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www.sasangrc.or.kr)에서 장애인식개선 영상공모전 참가신청서 내려받아 우편 및 이메일(sasangrc@empas.com, lsh5732@nate.com)로 접수하면 된다.

※ 문의 : 070-4261-8098

정규직 임금 4.3%↑, 비정규직 0.5%↑
임시직 임금 월 평균 140만9032원, 전년보다 1.1%↓

올해 1분기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1인당 임금은 월평균 140만903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1만6464원)에 견줘 0.5% 줄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빼고 계산한 실질임금 기준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1.1% 감소했다. 임시직 노동자의 1인당 실질임금은 지난해 1분기에는 1.7% 늘었으나, 연간으로는 연평균 0.5% 줄어든 바 있다.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로, 물가상승률이 낮았는데도 임시직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은 '질 낮은 일자리'가 급속히 늘어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노동조건이 가장 나쁜 시간제와 일용직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했다.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올해 3월 현재 시간제 노동자는 209만1000명으로 1년 만에 9.1%(17만4000명) 증가했다. 시간제는 임금이 낮은데다 노동시간도 짧아 월평균 임금이 73만1000원에 머물렀다. 반면 전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46만70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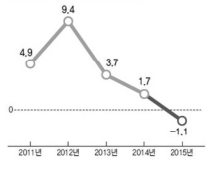
한편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사회보험 가입률도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5월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작년보다 3.6% 늘어난 238만4천원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 임금은 271만3천원으로 4.3%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146만7천원으로 0.5%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올 3월 기준으로 통계청이 분석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확대된 120%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가 열악해졌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8%포인트, 1.0%포인트씩 내렸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1년 전과 같았다.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1.8%p), 건강보험(1.4%p), 고용보험(4.0%p) 가입률이 모두 상승했지만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파견, 용역, 일일근로 등) 근로자는 하락추세였다.

올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1천 명(1.7%)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번 2014년 8월 기준 조사 때(607만7천 명) 600만 명을 처음 돌파한 바 있다. 다만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0%로 0.1%포인트 낮아졌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6.7%를 기록한 이래로 계속 하락세다. 비정규직 유형 중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209만1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5천 명(9.1%)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일용직 등 임시직 노동자들의 1분기 1인당 실질임금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임시직 취업자 가운데 월평균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평균 임금을 끌어내린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임시직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증감



부산사회복지자원봉사단 소식
http://cafe.daum.net/bswv

'2015 부산사회복지 자원봉사단의 날' 개최





6월 3일(수) 롯데시네마 부산대점(오투)에서 '2015년 부산사회복지자원봉사단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봉사단의 날 행사에서는 올해 개편된 부산사회복지자원봉사단 임원진 소개를 비롯해 모범자원봉사자 표창, 배지 수여, 박수기 단장의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으며 다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기별 7월 봉사활동 일정

구분	일자	봉사처
4기	8일, 22일	영광재활원
6기	10일, 21일	동래노인요양원, 동래종합사회복지관
7기	13일, 27일	평화노인요양원
8기	2일, 16일	정화양로원
9기	2일, 16일	천성재활원
10기	10일, 24일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11기	9일, 23일	신애재활원
12기	7일, 21일	동래노인요양원
13기	14일, 28일	애광치매노인전문요양원
14기	7일, 21일	호산노인건강센터
15기	10일, 24일	선아의집

구분	일자	봉사처
16기	9일, 23일	부산시노인건강센터
17기	2일, 16일	구세군부산요양원
18기	7일, 21일	자매정신요양원
19기	10일,24일	신망애요양원
20기	3일, 17일	애광노인요양원
21기	3일, 17일	상락정배산실버빌
22기	3일, 17일	안나노인건강센터
23기	9일, 23일	동원종합사회복지관
25기	3일, 17일	수영구노인복지관
26기	13일, 27일	구세군부산노인요양원
27기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기사제보 및 독자기고 안내



사회복지현장의 새로운 소식(행사, 사업, 프로그램 등)과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사회복지신문
E-mail : bcswl125@hanmail.net
Tel. 051-506-6633 / Fax. 051-506-6635

2015년 부산사회복지나눔대축제 주제/슬로건 공모

1. 부산사회복지나눔대축제는 어떤 행사인가요?

부산사회복지나눔대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 나눔국민운동본부가 후원하는 축제로서 매년 10월 초 주말에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에서 열립니다. 부산시민들이 함께 '사회복지'와 '나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 부산사회복지나눔대축제의 주제와 슬로건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나요?

주제와 슬로건은 매년 새롭게 정하여 축제의 메인테마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부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주제와 슬로건에 부합하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축제 주제 및 슬로건>

구분	주제	슬로건
2014년	나눔이 진화하다	진화하는 나눔, 행복한 부산
2013년	국민행복시대! 나눔이 함께 합니다.	With 부산! 나눔! 행복!
2012년	나눔은 Happy	나눔은_____이다.

3. 주제/슬로건 공모 개요

가. 공모내용 : 부산사회복지나눔대축제의 주제와 슬로건을 동시 제안

1) 주 제 : 나눔의 의미와 가치, 트렌드가 반영

2) 슬로건 : '부산'과 '나눔'의 의미가 적절히 조화

나. 참여자격 : 부산시민 누구나

다. 당선자수 : 총3명 (대상/우수/장려 각1명씩)

※대상(모바일상품권 7만원) / 우수(모바일상품권 5만원) / 장려(모바일상품권 3만원)

라. 참여방법 : 양식대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bcswl125@hanmail.net)

마. 공모기간 : 6월 26일(금) ~ 7월 3일(금) 18:00까지

바. 당선작 발표 : 7월 7일(화) 13:00 / 협의회 홈페이지(http://www.bswin.net)를 통해 발표

사. 심사기준 : 적합성, 창의성/독창성 등

아. 기타 유의사항

1) 1인 1작품으로 제한하며,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 확인시 제외될 수 있음.

2) 당선여부와 실제 채택은 다를 수 있음.

자. 문의 :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051-506-6633)